

여야, 곳곳서 정면 충돌... 민생 정기국회 '빨간불'

계엄령 준비·文 수사 공방 채상병특검법 등 정면 대치 야5당 "정치적 약속 이행을" 여 "정부여당에 책임 돌려"

여야가 계엄령 준비 의혹 논란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야5당의 제3차 추천 채상병특검법 등을 두고 정면 충돌하면서 민생 정기국회에 적신호가 켜졌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전날 '제3차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5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대법원장 추천'을 수용한 만큼,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3차 추천

안을 포함한 한 대표 제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한 대표는) 추가 조건만 붙일 뿐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법을 포기했다 보다가 사실인지 아닌지,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긴한지 한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법사위는 이날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여당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대법원장이 특검후보 4인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겠다고 한다. 이른바 제3차 추천 특검법안"이라며 "하지만 야당이 비토권을 부여하면서 '무늬만 제3차 추천'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당내 친한(친한동훈)계에서도 특검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주도권을 쥐고 있는 야당은 이날 중분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계엄 준비 의혹 발언을 두고도 여야간 거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과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국기 문란'이라며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해,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의혹 제기를 계속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도 폭발력이 큰 뇌관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 "패륜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확대 구성하는 등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고, 이 대표는 오는 8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하고, 패륜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성역 없는 수사"라며 맞받았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일가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도 비리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서 진상을 규명하고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러가지 정쟁 이슈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여야 대표 회담에서 약속한 민생 국회는 실현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당장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 여당은 "협치를 건 여차겠다는 선언"이라고 격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거대야당의 본분을 망각하고 모든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린 무책임한 모습이다"며 "출처와 근거가 미약한 내용을 사실인양 유도하며 정치공세와 선전선동을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1심 판결과 서울시교육감 등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여야 대치 수위는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여 민생 정기국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점점 커지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신정훈,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선임

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나주·화순·사진)이 4일 더불어민주당내 상설기구로 지방 분권과 지방 재정 자립을 위한 대한민국 혁신 과제를 수행중인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의 위원장에 선임됐다.



신 위원장은 전남도 의원과 나주시장을 지내 지방행정과 정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신 위원장은 "지방정부의 혁신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방자치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들과 함께 힘 모으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임미란 시의원 "빛고을노인타운 DB 구축 시급"

광주지역 최대 노인 복지시설인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의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로그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미란(사진) 광주시의원은 4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운영이 15년 지났으나 이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용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운영 효율성 향상,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응급대응 용의성 등을 들었다.

임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노인 복지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정성현 기자

강수훈 시의원 "광주종합건설본부 사업지연 41%"

광주시종합건설본부의 각종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간 7급에서 6급으로 2명, 6급에서 5급은 아예 없고, 5급에서 4급으로 딱 한 명이 승진했다"며 "선임급 인력은 승진하기 위해 책임지

강수훈(사진) 광주시의원은 4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종합건설본부가 토목 32건, 건축 27건 등 59건의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일시정지나 설계마져 중단된 사업이 24건, 4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지 않기 위해 본청으로 자리를 옮기려 애쓰고 저연차 직원들이 종합건설본부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광주시 주무부서와 종합건설본부가 사업을 대행하는 상하관계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기획과 실행을 광주시 주무부서와 종합건설본부가 따로 하다보니 사업기획이 면밀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종합건설본부가 광주시 주무부서와 관계에서 옥상옥이 되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방문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

박찬대 "응급의료시스템 사실상 붕괴... 절체절명 상황"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 대란 현실화를 우려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 정부를 겨냥해 "출범

2년 4개월이 지났는데 그 사이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등이 모두 위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의 정치 상황을 '헌정질서의 위기'라며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 수용과 내수

경기 진작 총력, 딥페이크 범죄 근절 노력, 그리고 공정 가치 회복을 위해 순직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개헌 문제에 대해,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은 합의가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하자"며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완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민심이고, 대통령이 싸우라는 대상은 국민"이라며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올린다

정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하는 보수개혁안을 제시했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88년까지 미뤄 재정 안정을 꾀하고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와 연금 지급 명문화로 청년층의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

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험료율(소득 대비 납부하는 보험료의 비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지만,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한 이후 26년째 유지되고 있다.

명목소득대체율도 42%로 높인다. 명

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소득보장 수준을 의미한다.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 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한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50대 가입자는 내년부터 매년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 높이는 방안이다. 출산 또는 군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중 일부를 연금액 산정 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딧도 확대한다.

서울=김선욱 기자